

경제위기와 저임금 고용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구미 지역의 실업과 노동시장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통념 가운데 하나는 미국, 나아가 영국과 캐나다 등 앵글로색슨형 나라들은 실업률이 낮지만 소득분배는 불평등하고 저임금 노동의 비중이 높은 반면, 유럽 나라들은 실업률은 높지만 소득분배는 비교적 평등하다는 것이다. 아직도 대체로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과거에 비해 그 차이는 크게 줄어들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세계임금보고서(Global Wage Report 2010/2011)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고용전망보고서(Employment Outlook 2010)에 따르면, 선진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약 3분의 2 정도의 나라에서 1990년대 중후반 이후에 저임금 고용의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선진국들만 놓고 보면 독일과 덴마크, 호주에서 저임금 고용 비율이 크게 늘어났다.

이번 호에는 주요 선진국의 저임금 고용 실태를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 보았다. 그 결과 경제위기가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저임금노동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laveren과 Tijdens는 네덜란드 노사관계 및 임금결정방식의 조합주의적인 특징을 소개하고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부터 저임금 고용이 증가추세에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위기에 대응해서 노동시장과 단체교섭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가 저임

금 고용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론하고 있다.

Grimshaw에 의하면, 영국은 오랫동안 다른 나라보다 높은 20%대 초반의 저임금 고용 비율을 유지해 왔다. 한편 이번 위기 시에 저임금 고용의 비율은 늘지 않았으나, 모든 근로자의 실질 임금이 하락하였고, 특히 최하위 임금근로자의 실질임금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저임금노동자가 위기로부터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경제위기 시에 보수당 정권이 집권하면서 저임금 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인 최저임금, 단체협약, 복지급여, 교육훈련 등에서 모두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가 나타났다는 점을 소개하고 있다.

Bosch와 Weinkopf 및 Kalina는 독일 통일 이후 단체협약 적용률, 노조조직률이 모두 감소하였고, 저임금노동자의 비율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꾸준히 늘어났다는 점을 보여준다. 경제위기의 영향을 받은 2009년에도 전년보다 저임금 고용의 비율이 더 높아졌다. 이와 함께 저임금 노동의 확대에 대응해서 2007년에 도입한 최저임금의 효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독일에서 도입한 최저임금은 우리나라처럼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단일한 최저임금이 아니고, 산업별 최저임금이다. 산업에 따라서 단체교섭을 통해 최저임금을 설정하거나, 단체교섭이 없거나 효력이 약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설정의 필요성을 평가하여 우리의 최저임금위원회와 비슷한 기구에서 최저임금을 설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최저임금이 도입된 산업은 9개에 불과하고 영향력도 크지 않은 실정이다.

Bernhardt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저임금 고용 비율이 높은 나라였던 미국에서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다. 위기 시에 중간수준의 일자리가 가장 크게 줄어들었고, 이후의 회복기에도 저임금 일자리가 가장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노동법에 의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나아가 Bernhardt는 미국의 정치가 경제위기 해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결책을 내놓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일자리 창출과 생활임금을 요구하는 대중적인 운동이 활성화되는 현실에서 희망을 발견한다.

시야를 우리의 내부로 돌려보면 우리의 현실은 더욱 어둡다. 위의 경제협력개발기구 고용전망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저임금 고용 비율은 2008년에 25.4%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다음이 미국으로 24.5%이다. 10년 전인 1998년에는 23.1%로 미국에 이어 둘째였지만, 10년 사이에

가장 높은 국가가 된 것이다. 우리나라 저임금 고용 비율의 장기추세를 살펴보면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는 꾸준히 줄어들다가 1990년대 중반 이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이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기조로 하는 시장만능주의 경제개혁이 저임금 노동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다른 한편 단체교섭이나 최저임금과 같이 저임금 노동의 증가를 막을 수 있는 제도들의 효과를 분석해 보면, 저임금 고용이 크게 늘어난 2000년대 이후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10%를 조금 넘는 데 불과한 낮은 조직률과 기업별 교섭, 최저임금이 올라가더라도 그만큼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 비율이 늘어나는 현실이 이러한 제도들의 한계를 잘 보여준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을 지배하는 관행과 노사관계의 틀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하지만, 이 또한 실현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희망이 있다면 최근 복지국가 관련 논의에서 드러나듯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들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희망버스를 타는 것이나,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 등 정부가 얼마 전에 내놓은 비정규직 대책도 더 이상 지금의 노동체제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신호로 읽힌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사회 곳곳에서 점점 더 신호들이 늘어나고, 또 만들어낼 수 있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은 더 커질 것이다. **KLI**